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
		배포일자	2022년 1월 3일(월) 총 4매	 환경특별시 인천
인천시	항 공 과	담당자	• 항공산업팀장 이상욱 ☎440-4806 • 담당자 강희진 ☎440-4808	
옹진군	환경녹지과	담당자	• 청소행정담당 장태석 ☎899-2621 • 담당자 김민기 ☎899-2623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환경특별시 인천, 탄소중립에 한발 더 ‘전진’

- 해양수산부 ‘지역밀착형 탄소중립 오션뉴딜’ 공모 유치, 국비 49억 확보 -
- 해양·연안 공간 활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, 재생에너지 전환 등 인프라 구축 사업 -
- ‘환경특별시 인천’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탄소중립 실현위해 최선 다 할 것 -

인천시가 환경특별시라는 명칭에 걸맞게 탄소중립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됐다.

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‘지역밀착형 탄소중립 오션뉴딜’ 공모사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.

탄소중립 오션뉴딜 사업은 연안지자체의 탄소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. 해양·연안 공간을 활용해 △온실가스 배출 저감 △재생에너지 전환 △해양 탄소흡수 능력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. 향후 총 사업비 70억 원의 범위 내에서 70%의 상당한 49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.

인천시는 공공일자리 창출, 국비확보,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응해왔다. 그러나 단순 수거·처리 방식의 저감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었고, 체계적인 해양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. 이에 위 사업에 응모하여 유치에 성공했다.

인천은 해양도시로서 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개선 문제는 오랜 숙원 과제였다. 시는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. 지난 3월에는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의 적극 추진을 위해 ‘환경특별시 추진단’을 신설하고, 5월에는 ‘해양쓰레기 저감 종합계획(2021~2025)’을 수립했다.

6월에는 지역 기업 및 단체 등 시민과 함께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약을 체결해 ‘반려 해변*’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. 9월에는 인천연구원에서 발표한 ‘2022년 인천 아젠다 30**’ 설문조사에서는 인천형 해양쓰레기 관리체계 도입이 1순위로 선정됐다.

* 특정해변을 기업·단체 등과 연결해 반려동물처럼 아끼고 돌봄으로서 기관이 주도해 해양 쓰레기 수거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

** 우선시되어야 할 정책을 시민의 시각에서 파악하기 위해 ‘인천광역시 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 현안 조사’를 진행.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남녀(1,036명)를 대상으로 설문조사.

더불어, 시는 탄소중립 오션뉴딜 사업을 통해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계획이다. 해양 환경 관제

센터, AI기반 빅데이터 플랫폼, 해양쓰레기 탄소저감 평가모델 등 드론과 위성을 활용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.

스마트 해양환경관리 플랫폼이 구축되면,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해양 폐기물 수거·처리 비용 절감과 관련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.

또한 플라스틱 등 재활용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, 해양쓰레기 정화선 운행 최적화와 수거 우선순위 지정 등 해양쓰레기 재활용과 수거 체계 효율화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감소시켜 해양분야 탄소중립 체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박남춘 시장은 “지역밀착형 탄소중립 오션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해 해양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, 환경특별시 인천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탄소중립을 실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<붙임> 사업 구상도

< 사업 구상도 >

